수능 체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공교육 및 교육과정, 그리고 수능의 정상화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최근 내놓은(또는 밝혀진) 수능과 관련한 발언과 그 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어 영역에서 비문학(독서) 문제 출제 금지, 사회, 과학 등 융합형 제재의 지문 출제 금지를 지시
(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다)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라) "교육당국 및 출제기관이 사교육계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가)~(라)에 대해서 각각의 발언 또는 출제 방침 지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입니다.

수능이 도입된 계기는 수능 이전의 전국적인 대입 시험이었던 학력고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이란, 수험생이 대학교에 입학하여 원활하게 수학(修學)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 교과 내용 암기만을 요구했던 학력고사라는 시험 자체의 근본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수능은 도입 목적과 그 본질상, 단순 암기력을 넘어 논리적 사고력과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의 고도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수능 국어 영역은 그러한 수능의 도입 목적을 현재까지도 충분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능 국어 영역의 시험 구조인 공통 과목 + 선택 과목 구조에서, 공통 과목은 또 다시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서 영역(비문학)은, 인문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과학, 공학 등의 다양한 제재들로 지문을 구성하고, 해당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영역은, 수험생이 다양한 제재의 지문을 제대로 독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지문에 없는 내용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는 수능의 도입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 정확히 합치할 뿐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면서 다양한 글을 읽고 학습하게 하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방식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수능 국어 영역에서 독서 영역의 출제와 사회, 과학 등의 융합형 지문의 출제는 수능의 도입 목적과 그 본질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와 (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이라고 문제삼으며 지난 1일 시행된 6월 수능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11번 문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화학 산업에서 이용되는 고체 촉매의 특징과 원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항은,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 선택자 기준 정답률이 각각 73%, 80%(출처:메가스터디)에 달하는 문항입니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수능 수험생의 70-80%가 '대학 전공 수준'의 '과도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해당 문항을 풀어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무언가를 따로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의 독서 영역은 지문 내에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근거를 찾을 수 있게 설계됩니다. 즉 일종의 오픈북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제시된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항을 수능의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항을 풀이하려는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해 봤다면 '대학 전공 수준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한 이해조차 없고, 수능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보지도 않고서 전국의 수험생이 인생을 걸고 치르는 시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로 출제 방침까지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어서, 사교육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단락에서는 수능 국어 영역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 출제하는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교육에서 독서 영역(비문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매우 뒤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 없이 단순 암기만을 요하는 학력고사는 90년대 초에 이미 그 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실제로 시험에 출제하는 내용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문학 작품 암기와 국어 문법 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관동별곡의 모든 문장의 해석, 국어 문법의 사이시옷 현상의 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 따위의 것들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인 평가를 고집하고 있는 게 현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수능은 도입 목적 자체가 이러한 학력고사식 평가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이기 때문인데, 공교육에서는 학력고사식 평가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문학 출제 금지' 따위의 조치를 하는 것은, 한참 뒤쳐져 있는 공교육에 이미 앞서 있는 수능을 갖다 맞추어 버리자는, 퇴행적 방식의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지금 2023년에, 관동별곡을 외우고 한글 맞춤법 규정이나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공교육의 수준이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라)입니다.
교육 당국 및 출제 기관이 사교육계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이 성립되려면 사교육계에서 교육 당국과 출제 기관에 교과외의 문제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청탁을 했거나, 교육 당국과 출제 기관에서 사교육계를 위해서 일부러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 것 중 하나일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밝히지도 않고 갑작스레 교육부 대입 담당국장을 경질하고, 평가원을 감사하는 것을 보면, 혹시라도 그 밑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현행 수능 제도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들과,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육 과정 상의 교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면서, 배우는 것은 적은데 학생들이 풀게 되는 문항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면, 자연스럽게 해당 범위 내에서 더욱 깊이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이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소위 '꼬아낸다'고 하는 문제를 출제해야만 학생들을 제대로 변별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교과 범위는 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생들은 '꼬아낸' 문제를 풀어야 하니 학습 부담은 더 심하게 됩니다. 게다가 교과 범위의 축소는 고등학교 때의 시험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 공부에 적응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능 특정 영역에서 선택과목제는 심각한 불공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제, 수학 영역 선택 과목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과학탐구II 영역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도박'이라고 불릴 정도이고, 공교육/사교육 강사 모두가 웬만해서는 선택하지 말라고 권유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 또한 교과 범위를 줄이면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추론에 기초해서 선택과목들로 잘게 나누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능이 정치나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수능은 몇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각자 나름의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니만큼 시험을 대비하면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항상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능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너무 자주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 과정의 변화에 의해서든, 정권 교체에 의해서든, 한 정권 내에서라도 관련 부처의 장이 바뀌어서든 너무 변화가 잦고, 수험생들은 이런 변화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수능과 관련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든 하여 수능이라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수능은 우리나라 인재들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살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되어 전세계를 뒤흔들고, 고도로 발달한 정보 기술과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공부하고, 또한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성공적으로 적응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길게는 몇 년을 공부하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도입 취지 그대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력 등 고도의 지적 능력을 배양해 주고, 대학에 가서 수학(修學)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맞설 지혜를 길러주는 시험이 된다면, 그것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능력있는 분들께 울림을 주어서, 백년대계로서의 교육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